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이틀간 개최

법사위 회동서 전격 합의 여 "규명" vs 야 "낙마" 총력전 증인·참고인 채택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개최하기로 일단 합의하면서 '조국 청문회'가 본격적인 국면에 돌입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해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국 살리기' 총력전에 들어간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무대로 조 후보자 낙마를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6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 법제사법위 간사 회동을 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30일 이전 하루', 한국당의 '9월 초 3일', 바른미래당의 '9월 첫 주 2일' 개최방안이 대립한 가운데 여야는 9월 2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법사위 간사간 절충했다.

합의는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날 중 인사청문회 합의 일정을 압박하는 동시에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회의를 통해 법사위 합의를 수용할지 결정한다.

일단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잡히면서 여야간 공방이 원내외에서 다각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당장 조 후보자를 겨냥해 전방위 의혹 공세를 펼치고 있는 한국당은 청문회에서 대규모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하면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자 민주당은 필요 인원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방어막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법사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일체 거부감 없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전격 수용해 달라"고 말하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정치공세로 보이는 증인채택도 관례로 많기 때문에 단정해서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문회장 밖에서 공방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 등의 '조국 때리기' 배경에 사법개혁 좌초를 통한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군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조 후보자가 딸 입시 논란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게 사과한 상황에서 더 밀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위기의

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 정책 발표에 대해 "후보자의 법무·검찰 개혁 의지를 지지하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역량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캐슬', '조로남 불', '조벌 해저드' 등의 신조어를 쓰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공세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교수 임용 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도 내놨다. 한국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 인망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가 나온다는 점 등의 거론하면서 사퇴·지명 철회는 물론 특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전 국민이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

했다"면서 "임명 강행하는 날은 문재인 정권의 종국을 앞당기는 날로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궤변으로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검찰 수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위법과 비도덕적 문제는 상식을 넘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청문준비단과 만나 의혹 설명을 청취했다. 이는 민주당의 우군으로 그동안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구체적 입장표명을 자제했던 정의당은 지난주 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정의당은 청문회 이후에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 이틀 연 사례는

자료 제출 등 갈등 ... 유시민·남재준 등 역대 6명

26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역대 야당 이상 진행된 청문회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정 후보자는 2005년 11월 17~18일, 유 후보자는 2006년 2월 7~8일 각각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이틀' 청문회 진행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19대 국회에서는 '이틀' 청문회가 4번 있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013년 3월 13~14일 열렸는데, 13일에 집중 질의가 이뤄졌고 14일에는 참고인 심문을 했다. 2013년 3월 18~19일 이틀간 열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인신상문제만 다른 공개회의만 열고 둘째 날 비공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013년 11월 12일 열렸는데,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갈등

을 겪다가 하루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2013년 3월 8일 개최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쏟아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을 해 '이틀' 청문회가 됐다. '사흘'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로는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가 있다.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관·박시환·김형식·김지형 대법관이 '사흘' 청문회를 거쳤다. /연합뉴스

예결위도 '조국 공방'

한국당·바른미래, 정책질의 대신 입시 부정 의혹 맹공

2018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의 무대로 탈바꿈했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이날엔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종 합격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합격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영 행자부 장관은 "제가 듣기로는 1991년 12월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논문

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저자의 기여도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집중하며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와 관련, "노무현 정부 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부처 간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기재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양새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재부가 되레 '살아 있는' 예산 집행을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특히 강제동원 역사와 관련한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전체회의 이관

한국당 "폭거" 반발... 개혁안 안전조정 요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소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 방안을 이관할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열린 1소위는 선거법 개정안 4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각 당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5개월동안 수없이 논의한 것을 갖고 논의를 하거나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며 "한국당이 20년 정치적 패배를 개혁할 의지만 있다면, 기득권을 조금만 내려놓을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의 논의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정말 이 자리에 앉았기까지 낮뜨거울 정도로 의원들의 발언이 부끄럽다"며 "선거법이 한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으면 제도가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총 22차례 소위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했는데 토론이 안 됐던 지적은 동의가 어렵다"며 "지금의 선거제도도 거대 정당들이 득표율보다 과도하게 점유율을 가진 게 사실인데 각 정당의 우위를 떠나서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면 개혁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일어났던 폭거에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정치 개혁이란 단어를 쓸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한국당 의석을 강탈하는 행위"라며 "다수가 소수 정당 의석을 뺏아서 친구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은 "언제 한 번 제대로 상의를 했느냐. 정말 요즘 말로 '살은 소대거리가 웃을 일'"이라고 했고, 최고일 의원은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비례제를 시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은 미개한 배내수엘라나 탄자니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제부터 숫자로 밀어부치는 표결 강행을 내려놔야 한다"며 "힘의 논리로 간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설 수밖에 없다. 모든 의사 일정 관행이 다 깨질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한국당 위원 7명은 전체회의로 이관된 4건의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안전조정이 필요할 경우를 요청하면서 법안 심사를 연기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전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6시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내일 안전 조정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당이 오지 않더라도 그대로 내일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높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시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 8억1천4백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광천동 650-193 외2필지 토지 : 1747㎡(528.5평) 건물 : 3169.12㎡(958.78평) 지하1층 지상7층 **감정가 : 40억6천2백5십만원 최저가 : (70%) 28억4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번지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6억7천7백만원**
- 아파트** 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 **감정가 : 2억8천6백만원 최저가 : 2억8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